

동물테마파크 무산... '송악 선언' 현실로

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사업자 측 변경 계획 부결
송악 선언 영향권 대규모 개발사업 중 좌초 첫 사례

3년 넘게 지역 주민 간 찬반 갈등을 빚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써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지난해 11월 원희룡 제주지사의 '송악 선언' 발표 후 처음으로 무산된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로 남게 됐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측이 신청한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부결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투자자와 투자 자본의 적격성, 미래 비전 등을 검증하는 기구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이다. 개발사업 심의가 끝나면 제주도는 그동안 제시했던 도시계획 심의, 경관 심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인·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도지사의 판단을 구해볼 필요도 없이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부결하며 동물테마파크 사업 인·허가 절차는 자동적으로 종료됐다.

사업자 측이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계획대로 강행하려면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 재추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심의에선 회의에 참석한 제주도 공무원들이 부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테마파크는 송악 선언 영향권에 놓인 개발사업이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송악선

언 2호 조치에서 "주민과 탐사르습 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하지 못한다면 사업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보다 앞서 원 지사는 송악 선언 1호 조치로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 일대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실천 방안을 내놓았지만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의 승인이 필요하고, 부지 매입은 토지주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주도의 의지대로 실천할 수 있는 2호 조치와는 결이 달랐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송악 선언 발표 후에도 지역 주민과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업자 측은 반대 주민을 상대로 제기했던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했지만 반대 운동을 주도한 마을 이장과 주민 4명을 지난해 12월 형사 고발해 여전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자금 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부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에게 1000억원대 자금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던 대명소노그룹은 해약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금 대여 계획 취소 방침을 세웠다.

한편 동물테마파크는 1670억원을 투자해 제주도 조천읍 선철리 곳자 앞 인근 58만㎡ 부지에 사자와 호랑이, 유럽 불곰 등 야생동물 23종·500여 마리에 대한 관람 시설과 호텔, 글램핑장,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제이에이에프(JAF)가 2007년 조랑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2016년 사업자가 바뀌고 사업 계획이 지금의 내용으로 변경돼 2017년부터 재추진 돼 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3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제주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홍보관에서 열린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대책 발표회' 시작 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원희룡 제주지사(왼쪽 두 번째)와 함께 전기차 모바일 충전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남는 재생에너지 전력 타 지역 전송

산자부, 3일 제주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발표
제주도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공식 건의

정부가 제주지역에 남아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분산하기 위해 육지로 전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잉 생산되는 전력 때문에 강제로 재생에너지 발전을 멈춰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에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3일 성윤모 산자부 장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잉여 전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를 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분산에너지란 태양열, 풍력 등 천연자원을 이용해 만든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소비지역에서 직접 생산해 사용하거나 남은 에너지를 저장·판매하는 시스템이다.

제주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CFI) 2030' 정책 추진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로 발전량이 급증, 전력 과잉 생산 문제가 심각하다. 발전을 강제로 멈춰 세워야 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져 왔다.

이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긴요한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해 분산에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단기 추진이 가능한 대책을 실현해 제주도를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성공 사례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제주-육지 간 해저케이블(HVDC·고압직류송전) 2개 라인을 통해 제주도 내 잉여전력을 육지로 보내기로 했다.

또 이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에 제주지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분산에너지를 통합해 전력시장 등에 거래하는 통합발전소(VPP) 제도 등을 실증할 수 있으며, 전력거래 특례 등이 허용된다.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구에 지정될 경우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 등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 해소와 신산업 발굴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 및 전기료 절감으로 인한 주민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 상반기 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워킹그룹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제주4·3추념식 행사장

방역대책반 설치·운영

3일 추념식 준비상황 보고회

제주도가 올해 4월 3일 봉행되는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때 방역 대책반을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탐라홀에서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73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은 행정안전부 주최로 4월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추념광장에서 봉행되며 오전 9시부터 식전 행사가 진행된다.

제주자치도는 정부, 4·3유족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쯤 추념식 규모와 참석 대상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참석 인원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추모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봄기운 속 활짝 핀 보리 이삭 시나브로 봄기운이 짙어간다. 산과 들녘에는 어느새 초록물결이 일렁인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3일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도로변 보리밭에 어느새 보리 이삭이 패어 봄소식을 전해 주고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추념 광장과 4·3평화교육센터에 간호사, 방역요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방역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사장에서 격리 공간과 구급차 등을 갖춘 현장 진료소를 운영한다.

한편 도는 올해 추념식에서 4·3특

별명 개정안 통과를 기념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영상을 송출한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時間

문창배 초대전

2021.02.18(목) ~ 04.16(금)

관람시간 안내

| | | | | |
|----|-------------|-------|-------------|--------------------------------------|
| 평일 | Open 11:00 | 주말 | Open 11:00 | · 휴관 : 매주 월요일 · 문의 : 064-750-2543 |
| | Close 18:00 | (±,日) | Close 17:00 | |

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 1F Gallery **ED**